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 모두의 카드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100% 환급됩니다.
-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해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하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87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두의 패스를 도입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예정으로, 기존 K-패스 이용자도 별도 카드 신청이나 패스 사전선택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하여 혜택 확대

k-패스 이용 사이트 - <https://korea-pass.kr>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확대

**추진배경**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혜택 확대 추진

**주요내용**

- (모두의 카드)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100% 환급  
\* 일반 국민 6.2만원(수도권 기준),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5만원,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
- (어르신 유형 신설) 기존 K-패스 환급사업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유형 신설(환급률 30%)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즉시 시행

##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운영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 031-210-2792

그간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위성을 활용하기 위해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3월 발사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위성 1호에 이어 국토위성 2호가 2026년 상반기에 발사됩니다.

- ▶ 국토위성 2호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2호의 본격 운영을 통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위성센터 누리집([nlsc.ngii.go.kr](http://nlsc.ngii.go.kr)) > 국토위성 소개

### 국토위성 2호 발사

#### 추진배경


국토이용, 자원관리,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과기부와 공동으로 정밀지상관측 쌍둥이 위성 1호·2호\* 개발 및 운영

\* 국토위성 1호 : 2021년 3월 발사, 국토위성 2호 : 2026년 상반기 발사 예정

#### 주요내용

- (운영) 국토위성 2대 동시 운영을 통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 및 서비스
- (활용) 공공·민간 활용을 위해 국토위성 산출물을 5종에서 8종으로 서비스 확대
- \* (현재) 위성정사영상, 사용자친화형 영상, 모자이크 영상, 영상지도, 긴급공간정보  
(향후) 기존 5종 + 3차원 공간정보, 국토현황정보, 변화탐지정보

### 국토위성 1호·2호 규격 및 형상

구분	개발 규격	위성체 형상
설계수명	4년	
해상도	흑백 0.5m급, 컬러(R,G,B,NIR) 2.0m급	
고도 / 관측폭	약 500km / 12km 이내	
국토위성 공전주기	약 95분(15회 공전/일)	
한반도 촬영주기	3~4일/1주 (1기당 약 100초 촬영)	
한반도 전역촬영주기(1기 기준)	6~12개월(구름 등 기상영향 고려)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본격 운영

##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소득 검증 생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4740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함

- ▶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계약 시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여,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자 등 최초 계약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추진배경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신속한 이주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 적용 제외 필요

####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주 지원 시 최초 계약에 한하여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044-201-415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8개 사업자('25.12월 기준)

- ▶ 배달 종사자는 2026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2026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추진배경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이 가능토록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배달 종사자 및 국민 안전 강화

#### 주요내용

· 배달플랫폼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해야 함

#### 시행일

- (유상운송보험 가입) 2026년 6월 3일  
단,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는 6개월 이내 유상운송보험 가입 필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2026년 12월 3일

##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044-201-4227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 ▶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국회 통과되었으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항공보험 제도 개선

**추진배경**

항공사고 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 금지
-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가입 거부 제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시행일**

2026년 6월 3일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044-201-4257

보다 안전한 하늘길을 안내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시행합니다.

- ▶ 새로 도입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통해, 그 간 내부 평가를 통해 취득하던 한정 자격\*을 외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업무 위탁)의 평가로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고,
  - \* 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시설(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외에도 해당 시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한정 자격' 취득 필요
- ▶ 2년마다 기량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항공안전법(시행 2025.11.28.)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11.28.)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준수 및 관제사 관리체계 개선제고

#### 주요내용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신설로 모든 관제사의 자격증명·한정 관련 시험을 내부 평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외부) 평가로 개선
- 관제사 교육체계 관련 기준을 신설을 통해 교육수준을 강화 및 정기·수시 기량심사 시행을 통한 항공안전 강화

#### 시행일

2025년 11월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044-201-4333

### 2025년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 ▶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 통행료 인하요금 : 경차(2,750원→1,000원), 소형(5,500원→2,000원), 중형(9,400원→3,500원), 대형(12,200원→4,500원)
- ▶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배경**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일반 고속도로 수준 인하

**주요내용**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12월 18일부터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  
(영종↔송도 간 편도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1

그간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되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2026년 3월 20일부터는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됩니다.

- ▶ 2026년 3월 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의 크기도 확대\*되어 번호판 시인성이 개선됩니다.

\* (기준) 가로 210mm x 세로 115mm, (변경) 가로 210mm x 세로 150mm

- ▶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210mm x 115mm)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5의2] 이륜자동차번호판

###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추진배경**

전국에서 사용신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고, 번호판 규격 확대를 통해 시인성 제고

**주요내용**

- (내용)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명(시·도 및 시·군·구) 표기 삭제
- (규격) 번호판 크기 확대 (210mm x 115mm → 210mm x 150mm)
- (예외)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존 규격 번호판 부착 허용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044-201-3926

그간 과적에 적발된 경우 중량 허위 기재 등을 하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실질 위반책임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 운전자는 화물 운송의뢰 감소 등을 우려하여 과적 신고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부터 실질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과적단속 과정에서부터 관계 서류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서류 종류도 폭넓게 확대됩니다.
- ▶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당초) 화물위탁증 등 2종 → (변경)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 확대

###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추진배경**

운행제한 위반 책임자에 대한 처벌원칙 확립

**주요내용**

- (절차강화) 과적적발 운전자에게 중량허위 기재, 과적 지시 등 실질 위반책임자를 구분하기 위한 관계 서류의 확인 절차 강화(선택→의무)
- (관계 서류) 당초 관계 서류는 2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서류 종류를 명문화하는 등 5종으로 폭넓게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훈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51-773-5734

연안여객선 모바일 앱을 통한 예매 시, 각종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하여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였으나, 각종페이(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여 더욱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또한, 알림 메시지(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하여, 여객선 예매 시, 개인별 운항일정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연안여객선 모바일 앱 개선

**추진배경**

여객선 모바일 앱 예매 시, 이용자 편의 개선

**주요내용**

- (간편결제 기능 도입)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 각종페이(pay) 등 간편결제 기능 도입
- (푸시 메시지 도입) 여객선 예매 시, 개인별 운항일정을 푸시 메시지를 통해 자동 알림

**시행일**

- (간편결제 기능 도입): 2026년 6월 중(개시일 미정)
- (푸시 메시지 도입): 2026년 6월 중(개시일 미정)

##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온라인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051-773-5772

기존 수기로 처리하던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접수와 응시생 정보 관리를 2025년 10월부터 전용 시스템으로 진행 중입니다.

- ▶ 수험생이 전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수험생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 ▶ 시험장 배치 및 채점 관리 등 응시생 정보를 전용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원서접수>원서접수 신청>본인인증>응시원서 작성>응시료 결제>접수확정 문자 수신>응시표 출력

### 도선사 시험 전용 시스템 개발

**추진배경**

국가자격시험(도선사 선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원서접수(전자), 접수증(응시증) 배부 및 전문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응시생 정보관리 및 편의 제공
- 전용 시스템 통한 시험실 배치 및 채점 관리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시행일**

2025년 10월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051-773-5985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을 통해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합니다.

- ▶ 첫 번째,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합니다.
- ▶ 두 번째,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를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합니다.
- ▶ 세 번째,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합니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하여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 주말농장, 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2029)

#### 대상지

384개\*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363개 대상사업 선정  
\* 지자체 수요 167개소, 우심지구/연론보도 210개소, 타 사업계획 7개소

#### 연안정비 유형

침식 222개소(16,495억원, 61%), 침수 82개소(5,758억원, 23%), 국민안심해안 20개소(1,288억원, 5%), 친수 39개소(1,443억원, 11%)

(단위: 개, 억원)

구 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합 계	
	침식		침수		국민안심해안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제3차	169	15,337	80	6,200	-	-	34	1,472	283	23,009
제3차(변경)	222	16,494	82	5,758	20	1,288	39	1,443	363	24,984

##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51-773-5951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항만·어항 시설물을 보호하는 소파블록\*이 파손이 되면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1월부터는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트라포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로 방파제 등에 연안 보호와 파랑 저감 목적으로 설치

- ▶ 환경 유해성이 없는 무근콘크리트로 제작된 파손 소파블록이 수중 하부에서 방파제 등의 시설물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합니다.
- ▶ 재활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폐기물 처리 및 탄소 배출 비용이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소파블록(테트라포드) 재활용 규모 확대

**추진배경**

폐기물로 처리하던 파손된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확대 도모

**주요내용**

- 항만·어항의 배후도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의 힘을 감소·분산시키는 소파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나, 파손될 경우 폐기물 처리 중
- 파손된 소파블록은 환경유해가 없는 무근콘크리트이면서 수중 하부에서 방파제 등의 시설물 보호 등이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51-773-5951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으로 공공부문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 2026년 5월에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

- ▶ 또한, 2026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양레포츠комплек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부산항북항 재개발 홍보관 블로그([blog.naver.com/busanportcity](http://blog.naver.com/busanportcity))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 추진배경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

\* (1단계) 면적: 155만㎡ / 총사업비: 2조 9,929억원 / 사업기간: 2008~2027

#### 주요내용

· (잔여사업) 2024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상부 공공콘텐츠 및 해양기관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등 잔여사업 추진 중

· (투자유치)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양전략을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07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변경됩니다.

- ▶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 ▶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하여 연말 혼잡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

### 예시

(면허소지자가 2026년부터 첫 갱신기간 도래 시) 도래하는 갱신기간이 2026. 1. 1.~2026. 12. 31.이고,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	개정 '부칙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갱신기간은 2026. 1. 1.~2027. 2. 15.로 자동 변경되어 적용
(2026년부터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다음 갱신기간) 2026. 4. 15. 운전면허를 갱신한 자의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	개정 내용에 따라 갱신일로부터 10년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적용 (2036. 2. 16. ~ 2037. 2. 15.)

###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1016호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 추진배경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증진

##### 주요내용

그간, 1월 1일~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직전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변경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309

음주운전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측정 불응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 약물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습 약물 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45조, 제82조제2항제3호,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64호]

###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

**추진배경**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대상 검사 의무화로 약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약물운전 처벌 상향(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상습 약물운전자 및 측정거부자를 가중처벌

**시행일**

2026년 4월 2일부터